

September 27,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9. 21. ~ 9. 27.)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참고자료]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pdf](#)



①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는 1+1제도 실시, 창업정보를 책임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고시 제정, 편의점 자유클럽 이행 점검을 위한 근접출점 실태조사(창업단계), ②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 3개 부처간(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정책수단 연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강화(운영단계), ③ 매출저조로 중도폐점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폐업단계)

[금융위·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제공계획

[참고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제공계획.pdf](#)



①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등, ②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고 의무화, ④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9. 11. 4. 까지 입법예고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참고자료]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①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등, ②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고 의무화, ④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9. 11. 4. 까지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5G+ 실무위원회 개최

[참고자료] [제2차 5G플러스 실무위원회 개최.pdf](#)



2019. 9. 26.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19. 4. 3.) 이후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5G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한 투자 및 ICT 생태계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근간이 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함.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 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및 제2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행법 시행규칙 및 내규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12명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발급 및 취소 여부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및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편중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저비용 결제수단 활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체크카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회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3.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명단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협회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임위는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복지위, 국토위, 과방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19. 9. 27. 기준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이 수록된 국정감사계획서는 7개 상임위에서 모두 확정되었으나, 금번 국정감사의 경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증인 채택 여부(특히 정무위, 국토위) 및 진행상황 등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매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명단
정무위		없음
산업위		
환노위		
복지위		
국토위		없음
과방위		
법사위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 전략적 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